정청래 민주 신임 당대표 선출… 파급효과 '주목'

'당원 주권시대' 선언… 당 권력구조 대전환

정 대표, "국회의원 오더표 통하지 않아" 개혁 의지
"당원 눈치 보는 시대로" 권력관계 역전 현상 진단
당원 주권 정당 TF 가동 당헌·당규 정비 나서
기존 정치 기득권층 저항 극복 등 과제 남아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당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일대를 방문, 수해 피해를 입은 오이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원 주권시대'를 내세우며 기존 정치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정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천명했다.

그가 약속한 '1인 1표 시대'는 기존 대의원제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당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당 내부 권력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오더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기존 정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과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지시하던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의원 숫자가 지역구별로 45명 안팎인 이유가 버스 한 대 좌석 숫자에 맞췄다는 말도 있다"며 과거 정치권의 후진적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몇 명 확보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었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부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진단했다. "이제 당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했다"며 권력관계의 역전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끼리 몰려다니고 국회의원 몇 명 확보했다며 숫자로 장사하려는 순간 당원들에게 철퇴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당원들은 국회의원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언행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다"며 당원들의 정치적 각성 수준이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켜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원 주권 정당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정 당대표는 "즉시 당원 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며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공화정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척결을 확실히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을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당과 대통령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그는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고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게 당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정 경선 시스템 구축에도 의지를 보였다. 정 당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당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억울한 공천탈락 컷오프도 당했지만 당을 탓하기 전에 저의 부족함을 탓했다"며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을 뛰어다녔다"고 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당원 주권 시대 선언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반 당원들의 발언권 강화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다른 정당들에게도 유사한 개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정치 평론가는 "민주당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정당 정치 전반의 민주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원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기존 정치 기득권층의 저항이 예상된다. 또한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이 제도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내 한 당원은 "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대중 영합주의적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의 개혁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은 물론 한국 정치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식량안보 지켜낸 한미 통상협상 환영"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 전국농어민위원회 공동 논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내고 최근 타결된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의 노력, 그리고 전국 농민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후 진행될 검역절차 개선 협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주권의 문제"라며 "검역기준 완화를 협상의 뒷문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만호 기자

김영태 남원시의장 지역 농업 현안 청취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지난달 31일 남원시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강성철 회장, 경영인연합회 이상호 회장, 농민단체 회원, 남원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 및 밭작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농업예산이 감액된 실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노지작물 시설지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계절근로자 활성화 등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영태 의장은 "재난에 가까운 기후변화와 열악한 대미무역환경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충이 매우 깊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들과 대응 방안들은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남원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치매관리 지원 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숙자 의원은 "최근 젊은 치매라고 불리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조기 발병 치매를 말하는 것으로,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클 수 있어,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초로기 치매 환자 지원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정책과제에 발맞춰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담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전주 통합 갈등 해법 찾기 '첫걸음'

자치분권포럼, 상생토론회
청주·청원 등 사례 공유
전북형 상생 해법 찾기 나서

"민주적 절차·상대방 배려 빠져 있어" 지적도

(사)자치분권포럼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균형발전의 합리적 논의'를 주제로 '전주·완주 행정통합 의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와 완주 간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 속에,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사)자치분권포럼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균형발전의 합리적 논의'를 주제로 '전주·완주 행정통합 의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설득과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오히려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1부 발제에서는 청주·청원, 마창진, 제주 등 타지역 통합사례가 소개됐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청주·청원 통합은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제를 조율하며 자율적 과정을 이끈 사례"라며 "주민 체감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마창진 통합 실패 원인으로 중앙주도 방식과 사전 설득 부족을 꼽으면서 "정서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종태 전 제주도의원은 "제주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기초자치권 부재로 자치복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통합 후의 거버넌스 설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부 토론에서는 지역 전문가들이 통합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전주는 전북의 심장, 완주는 녹색성장의 허파다. 통합이 전략일 수는 있으나 지금은 정해진 길을 강요받는 느낌"이라며 "절차적 민주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완주 입장에선 현재 통합 논의가 '합의 없는 통보'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전주시가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주와 완주 주민들이 직접 발언하며 민심을 드러냈다. "통합이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면 현재 세대는 과정을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완주의 농촌성과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총평에 나선 이명연 이사장은 "통합은 더 나은 전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토론회가 주민 참여형 논의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JTV와 뉴스프리존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북경제신문, 전북제일신문이 후원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만호 기자

한승헌 변호사 정신, 학교 교육으로 계승

전용태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최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자 전북이 낳은 큰 인물인 故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헌신한 대표적 인물로,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정의와 원칙을 실천한 원로 법조인이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에 귀감이 되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한 변호사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물 건립 및 관련 자료 수집·조사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 위탁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승헌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승헌 변호사의 정신이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도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김동구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조례에서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주 15개, 군산 26개, 익산 15개 등으로 80개가 전북자치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